

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

2016. 12. 28

목 차

I.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실적

II. 자율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

III. 향후 금융규제 운영방향

I -1.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

금 융 개 혁

" 왜 우리는 글로벌 금융기업이 없을까?"

- ① 과도한 규제 ② 보신주의 ③ 혁신의 부재

『경쟁』 & 『혁신』

- ① 금융규제개혁 ② 성과주의 ③ 핀테크 육성

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지속 출현하고 국민의 편익이 제고

금융규제개혁 추진

모든 규제 · 종합 검토

- ('15) 공적규제(법령 · 행정지도) → ('16) 사적규제(자율규제) 정비
- 전수조사 → zero-base 검토

	전수조사	정비건수
법령규제	1,064건	211건
행정지도	700건	650건
자율규제	245개 규정	99 개 규정

현 장 점 검

- 현장점검반, 옴부즈만(민간 7인) 운영을 통해 외부의견 수시 청취
- ※ 현장점검반 운영 실적('16.10월)
 - ✓ 1,126개 금융회사 방문
 - ✓ 3,224건 회신(수용률 : 48.2%)

※ 현장의 목소리(금융권 FGI 결과)
 “현장점검이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으며, 이제는 정착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”

규제개혁의 제도화

- 정부 최초로 총리 훈령으로서 **금융규제운영규정*** 시행('16.1.4)
- * 금융위,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구가 규제 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절차

금융규제운영규정 주요내용

- ✓ 가격 · 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금지
- ✓ 행정지도 절차 법령수준으로 강화
- ✓ 옴부즈만 등 사후통제장치 신설

1-2. 금융규제개혁 추진실적

법령규제개혁 (’15.6~12)

- **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** → 규제를 **4개 유형**으로 구분하여 개선

건전성
선진화

영업행위
자율화

소비자보호
강화

시장질서
정교화

- ✓ 20년만의 **보험업 규제개혁** (예) 보험 가격 · 상품개발 · 자산운용 사전규제 폐지 등
- ✓ **핀테크 활성화** (예)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, 비대면 거래 허용범위 확대 등
- ✓ 금융투자업 **기업금융기능 강화** 등 (예) 기업대출 관련 건전성규제 합리화 등

그림자규제개혁 (’15.8~10)

- 행정지도 정비(**700 → 50건**) ※ 미등록 행정지도는 일괄적으로 무효화 조치
- 행정지도에 대한 **내부통제 강화**를 위해 **운영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**

- ✓ 문서주의 원칙, 행정지도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
- ✓ 금융감독원 내 행정지도 사전심사 위원회 설치
- ✓ **옴부즈만 운영, 외부 전문가 실태점검** 등 → 민간에 의한 모니터링 강화

현장의 목소리 (금융개혁 FGI 결과)

“핀테크 기업, 금융회사, 전문가 그룹 모두 핀테크 관련 제도적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

“금융 관련 11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 · 신분제재 위주의 검사 · 제재 규정을 기관 · 금전제재로 전환함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 기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”

II. 자율규제 개선

'15년 법령규제, 그림자규제 에 이어 '16년 자율규제도 전수조사 · 정비

➔ 금융규제개혁의 완결

자율규제란?

- 금융업권 단체의 **회원사들간 합의**에 의해 운영되는 규제로서
①정부가 **민간에 위탁**한 규제와 ②민간의 **자발적 운영** 규제로 구분 가능

① : 광고, 경영공시, 상품 비교공시 등 ② : 구조조정 협약, 내부통제기준 등

- **7개 업권***, **거래소**의 국민의 권리 ·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**245개**

* 은행연합회 / 금융투자협회 / 손해보험협회 / 생명보험협회 / 저축은행중앙회 / 여신금융협회 / 신협중앙회

현장의 목소리
(금융회사 간담회)

“2015년 법령·그림자규제 개혁 이후 행정지도 내부절차가
엄격해지자 자율규제로 우회하는 사례 발생”

개선방향

-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낡고 비합리적인 자율규제 **폐지 · 완화**
- 법규로 규제해야 할 사항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**우회규제 폐지**
- 자율규제 운영절차 제도화 → **투명성 · 객관성 제고**

민간 스스로 개선방안 마련

✓ 자율규제기관별 전문가 TF 구성

* '16.6~8월 운영

✓ 업권별 준법감시인 의견 청취

금융당국 TF 검토 · 보완

✓ 금융당국 내 업권별 TF 구성

* 금융당국, 업권 준법감시인, 옴부즈만,
연구원, 교수 등 10~15인으로 구성

* '16.8~10월 수시 회의 개최

종합 논의 · 의결

✓ 옴부즈만 회의('16.10.14)

✓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의결(11.3)

II-1. 개선사례 : 국민의 금융생활 속 불편 적극 해소

1 대출도 수수료 없이 반품 가능

* 은행여신거래약관 등 개정(연내)

"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B은행 이율이 더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은행을 바꾸고 싶지만 위약금 부담이 큼"

- ✓ **2주 이내**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 가능
- ✓ 은행 : '16.10월, 제2금융·대부업* : '16.12월

* 대부업은 대출잔액 기준 상위 20개사 우선 시행 → 금감원 검사대상 전체로 단계적 확대

2억원 대출, 14일 후 상환

(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.5% 가정)

소비자부담 150만원 감소

2 저축은행의 안 쓰는 계좌, 휴대폰으로도 해지 가능

* 저축은행 예금규정 개정(연내)

"필요없는 계좌 해지하는데 꼭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지?"

- ✓ 은행처럼 저축은행도 **사용하지 않는 계좌***를 **모바일 뱅킹 등으로 해지**하는게 가능

* 1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최근 1~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



II-1. 국민의 금융생활 속 불편 적극 해소

3 신용카드 가입 시 서류작성 부담 축소

*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 개정(연내)

"금융회사 직원이 표시한 항목에 따라 형식적인 서명만 반복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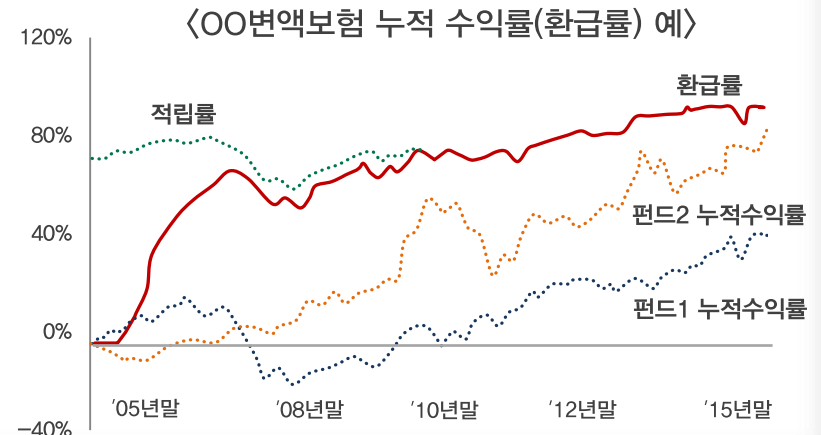
✓ 신용카드 가입 개인정보 제공 필수동의 항목 축소 : 6번 → 2번



4 변액보험 가입자의 투자피해 예방노력 강화 *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 시행세칙 개정('17.上)

"변액보험 가입할 때 수익률(환급률)을 확인할 수 없어 보험상품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"

✓ 변액보험 **상품별 수익률** 및 해지 환급률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**공시**



II-2. 성장성 있는 기업 투자 기회 확대

1 성장성 있는 기업의 상장 요건 완화 : 테슬라 요건 신설

*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(연내)

"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영업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데 이익이 아직 없다는 이유로 상장을 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"

- ✓ 혁신적 서비스 제공 기업이 성장성을 평가 받는 것 만으로도 증권사 추천으로 상장 → 소셜커머스, O2O 서비스도 상장 가능
- ✓ 대규모 기술투자가 필요한 이익미실현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



미국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NASDAQ 상장

* '16.10월 시가총액 약 33조원

2 일시적 사유로 투자위험 기업으로 공시된 기업의 재기지원 *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('17.1/4)

"거래소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후 해당 기업의 회사명만 공시하니까 우리 회사가 왜 지정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"

- ✓ 투자주의 환기종목* 지정 후 해당기업에 지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보제공

* 투자주의 환기종목 :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

➡ 기업의 부실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 지원

〈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과정〉

- ✓ 안정성, 수익성, 활동성, 성장성, 건전성 관련 변수 선정 후 통계모형을 통해 결정

(개정전) 통계모형으로 선정된 기업명만 공개

(개정후) 통계모형의 구체적 측정내용도 공개

II-3. 우리 이웃의 대출 부담 완화

1 내 집 마련에 따른 대출 부담 완화

* 은행-주택금융공사 협약서 개정 등

“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휴직을 하게 되니까 이자부담도 큰데 원금까지 나눠 갚아야 하니 연체부담이 큼”

- ✓ 실직, 폐업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1년간 중단 가능
- ✓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 : '16.12.30 시행

〈원금상환 유예 가능 모기지 상품〉

종전

U-보금자리론
디딤돌 대출

'16.12.30 ~

U-보금자리론
디딤돌 대출
안심전환대출
기타 적격대출

2 서민,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

* 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개정(연내)

"화재가 발생해서 장사를 못해 천만원을 1년째 연체 중인데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이자감면 외에는 방법이 없음"

- ✓ 저축은행 대출 장기 연체 시 이자감면 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유예, 만기연장 등도 가능
- ✓ 중소기업도 저축은행에서 프리워크아웃 가능

〈저축은행 자체워크아웃 방식〉

종전

이자감면

'17년 ~

이자감면
원금 상환유예
만기연장
금리인하 등

II-4.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

1 은행의 주식·채권투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폐지

* 유가증권 손절매 가이드라인 폐지(연내)

"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주식임에도 주가가 규제 한도 이상 하락하면 처분을 해야 해서 투자전략에 한계가 발생"

- ✓ 은행들이 **동일한 시장상황**에 대해 **각자의 전략**에 따라 증권을 운용하는 게 가능

➡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

〈A사 주식투자 사례〉



(종 전) 매입가 100 → 50원 하락 시 처분
∴ 최종 : 50원 손실

(폐지후) 매입가 100 → 150원에 처분 가능
∴ 최종 : 50원 이득 가능

2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대출 담보범위 확대

* 금융투자회사 영업규정 개정(연내)

"비상장주식은 은행에서는 대출 담보로 가능한데 증권회사에서는 불가"

- ✓ 금융투자업자가 대출 시 **담보로 취급하지 않는 증권을 스스로 결정**하는 게 가능

➡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

〈 사례 : 의무보호예수주식 〉

- ✓ B사 최대주주 김OO씨는 B사의 상장에 따라 B사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매각할 수 없는 상태 (의무보호예수)

종전

'17년 ~

규제에 따라
담보 불가

담보가능 여부를
회사자율로 결정

Ⅲ. 향후 금융규제 운영방향 : (1) 상시 개선 시스템

이번에 정비된 자율규제가 다시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
자율규제 운영을 시스템화하여 관리

자율규제 관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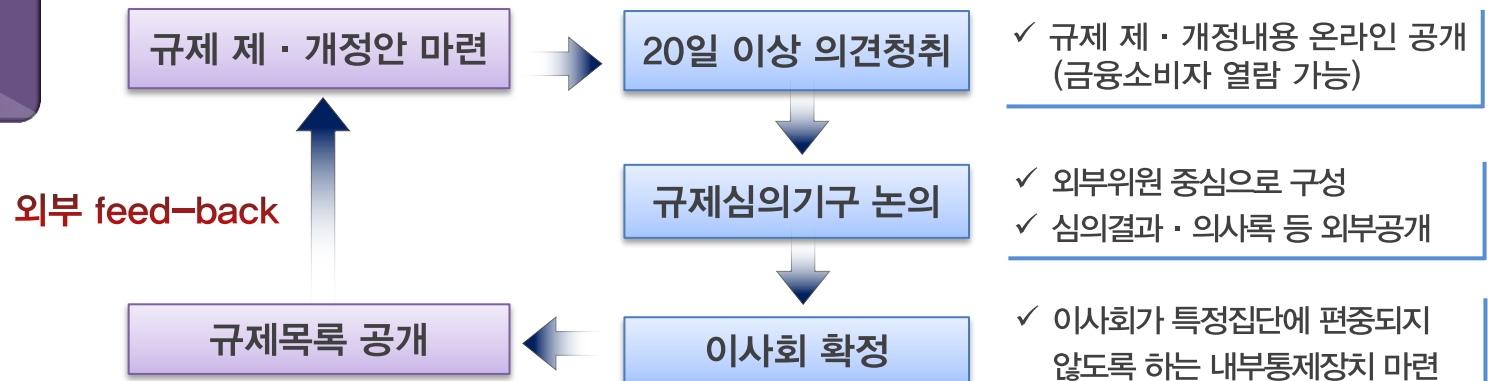
- 7개 협회 · 거래소 모두 규제 관리에 대한 **규정이 없음**
- 규제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**투명성이 낮음**

현장의 목소리
(금융권 간담회 결과)

“자율규제 제개정 시 실무상 의견청취를 하지만 그 기간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이나 절차가 없는 상태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”
“규제 제 · 개정 의사결정이 보통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사회가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움”

개선방안

- 자율규제 운영 **원칙 · 절차 규정화** ('17.1월)



(2)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구축

금융규제 테스트베드란?

- 시장참여자가 새로운 금융상품 · 서비스 **시범사업**을 할 때 관련 **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**하는 시스템

운영 방식

- **(위탁테스트)** 미인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면 기존 금융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위탁받아 시장에서 테스트
- **(지정대리인)** 미인가 기업이 기존 금융업자가 인가받은 권한을 일정기간 사용하여 자신이 개발한 서비스 테스트
- **(기타)** 한시적으로 인가하거나,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선진국 규제방식은 중장기적으로 도입 검토 중

현장의 목소리
(핀테크업체 설문결과)

“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시 핀테크 업체의 후속투자 유치(80.2%) 및 서비스 상용화 기간 6개월 이상 단축(32%)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”

※ 적용 사례 : 인터넷 은행

절차 일부 면제로
영업개시를
6개월 이상 단축

일 반

본인가
(‘16.12)

전산테스트
(‘17.3~6)

영업실시
(‘17.7)

미인가 기업에
절차 특례 제공

전산테스트
(‘16.7~10)

본인가
(‘16.12)

영업실시
(‘17.1)

(3) 비조치의견서 활성화

비조치의견서 운영 성과

- 비조치의견서란,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 관련 질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제재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알려주는 문서
-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발송건수는 ('01~'14) 10건 → ('15~'16.10월) 1,095건으로 비약적 증가

※ 주요 사례

- ✓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게 가능
- ✓ 온라인 카드대출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이 자율화되어 개인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가능

- 최근 양질의 비조치의견서가 증대되고 있으나, 안착 노력 필요

현장의 목소리
(금융회사 FGI 결과)

“금융당국이 가장 달라졌다고 체감되는 제도가 비조치의견서입니다. 규제적용이 불확실하여 실행이 망설여질 때 제재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”
“그러나 아직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모르는 금융회사가 많아 홍보가 더 필요”

활성화 방안

- 반기별로 금융업권 협회가 업권 내 금융회사들의 비조치의견서를 접수받아 협회 명의로 제출 → 금융위 일괄회신
- 비조치의견서 내부통제 절차 개선
 - ✓ 금융감독원 내 “비조치의견서 심의회” 위원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
 - ✓ 중요사안은 반드시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등
- 금융회사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 활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

감사합니다